

잇단 갈등 U대회 선수촌아파트 해법 찾나

추가분담금 360억원 놓고 집행부-비대위 끝없는 충돌

광주 최대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몸싸움 끝 새 집행부 구성 내달 입주 여부·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영향 등 주목

광주지역 최대 재건축아파트인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재건축 조합의 집행부가 새롭게 꾸러지면서 입주시기,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비상대책위)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등 집행부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집행부와 새 집행부를 선출하려는 비대위 측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합-비대위 충돌 끝에 집행부 교체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측과 비상대책위 측이 총회장 진입을 두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충돌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입주대상 총 276세대 중 조합원 2755세대에게 전용면적별 800

만~1500만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자, 이에 반발하는 입주자 비대위 측이 신규 조합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 연 것이었다.

총회 시작 전 조합 측 지지자들이 총회장 진입을 가로막고 의사 등을 던지며 총회 진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측 관계자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해임된 정모 조합장 대신 비대위원장 출신의 이만자씨를 신규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새롭게 꾸리고 조합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추가 분담금 360억원이 갈등의 '불씨'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측 충돌은 조합 집행부 측이 추가 분담금 360억원을 책정, 조합원에 통지하면서 비롯됐다.

조합 집행부 측이 4월 입주를 앞두고 금융이자, 공사비, 용역비 등 364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2755명의 조합원에게 추가로 부담할 것을 지난 2월 알린 것이다. 이에

비대위 측은 "재건축 사업을 주도한 집행부의 사업비 부풀리기, 방만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사비, 금융비용 등 실제로 늘어난 비용은 극히 일부"라며 반발, 세를 규합해 새들을 조합 집행부를 꾸렸다.

신임 조합 집행부 측은 "전임 집행부 측으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는 대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과 그간 집행된 비용 모두를 면밀히 살펴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임 집행부 측은 "업무는 차질없이 인계할 것이며 오는 26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 부담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입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영향은? =지난 2008년 9월 정비구역 지정조치가 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은 현재 9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다음달 7일부터 2개월간이다.

준공검사, 아파트 보존 등기 등 행정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어서 조합 측이 시공사 측에 부담해야할 추가 분담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입주는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대리하는 정비업체 관계자는 "집행부 교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만 원활하게 이뤄지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추가 분담금의 경우 조합 측이 이를 시공사(현대)에 지급해야하는 만큼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임 집행부 측은 "조합 집행부 교체로 입주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공사와의 협상을 거쳐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상황을 수습할 계획"이라면서 "U대회 선수촌 사용료(임대료) 소송도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관계를 전임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아 조합이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제공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은 임대료 문제로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가 6개월간 사용료로 36억원을 제시하자 조합 측은 467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임 집행부 측은 광주시와 맺은 선수촌 아파트 임대 계약도 전임 집행부가 허술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듬어 휘말리게 됐다면, 조합원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백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던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이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 집행부 승인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면 예정대로 4월 초 입주가 이뤄질것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대란이 우려된다. 사진은 광주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의무관리 대상 확대·수시 회계 감사 등 아파트 회계 비리 예방 강화 방안 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는 20일 공동주택 회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연방회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와 합동단속을 한 것이 경각심 고취와 함께 제도개선의 계기가 됐지만 각종 공사나 용역과 관련한 비리 등에 대해서는 찾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리 은폐의 면죄부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행 회계감사는 공동주택에 맞지 않고 비용만 과도하게 지출된다"며 "전산 처리와 관련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회계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했다. 연합회는 ▲150가구 이상으로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확대 ▲수시 회계감사 가능 ▲합동감사 전국 시도 의무화 ▲회계자료 작성 부실 및 관련 규정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을 내놔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는 동대표나 관리소장간 동조와 방관 또는 결탁이 없으면 단독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며 "관련자 모두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민관 합동으로 전담팀을 꾸려 쉽고 구체적인 맞춤형 관리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해야만 분쟁과 비리,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광주시와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강운태 전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영장 청구

광주지법 내일 영장실질 심사

검찰이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간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등 11명을 광주지법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산악회 관광 행사를 개최하면서 회비보다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강

전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산악회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두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강 전 시장은 "충분히 소명했다"며 "회비를 내고 일반 산악회에(회원)로 몇 번 참여했다. 사전 선거운동은 한적 없다. 산악회 조직 과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7월 4·13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선거사법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교조 전임자 징계 절차 착수

광주교육청 29일, 전남은 31일 징계위 개최

광주·전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29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휴직상태였던 정 지부장 등 전교조 전임자 중 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 면직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경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에 따른 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복귀 통보를 받고 전임자 4명 중 정 지부장을 제외한 3명이 일선 현장으로 복귀했다.

전남교육청도 오는 31일 열리는 징계

위원회에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본부 파견 전임자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절차에 착수했다.

전임자의 휴직이 지난달 29일 끝났고 이를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해당자가 복직을 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기간이 지난달 29일로 만료된 만큼 더는 전임을 허가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임자들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이 부당하다며 학교 복귀를 거부하며 해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방본부장이 서장급 승진 인사 개입 파문

성적 상위자 바뀌기 지향

전 전남본부장 등 4명 송치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급 승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소방서장급(소방정) 승진 인사에 개입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부는 없앤 혐의(직권남용·증거인멸)로 전남도소방본부 박모 전 본부장과 박모 순전소방서장, 인사담당자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23일 소방정 승진 심사 과정에 개입해 당초 심사위원들이 승진자로 결정된 성적 상위자를 후순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진 대상자 4명의 자리를 놓고 소방령 16명을 심사해 근무성적평정이 우수한 3명을 우선 확정된 뒤 남은 1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등 7명은 족지로 의견을 수렴해 소방

본부 근무자 A씨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이었던 박 서장이 보고를 위해 박 전 본부장실에 다녀온 뒤 승진자 교체를 제안했고, 심사위원들의 박수 동의를 통해 일선 소방서 근무자로 바뀌었다.

A씨는 부당하게 승진 인사가 반복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승진대상자로 결정했으나 박 서장이 본부장실에 다녀와 갑자기 현장 근무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며 박수로 통과를 유도했다"는 일부 심사위원 진술과 박 서장이 본부장실에 다녀오기 전까지의 회의록이 삭제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집무실을 비워 박 서장과 만나 인사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현장 근무자를 승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중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폐사시킬 한우 밀도축 유통 축협간부 구속

보험금 타내고 혈통지원비 횡령

폐사 처리하기로 한 한우를 밀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축협 간부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한우를 폐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고 일부를 밀도축해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등)로 영양축협 간부 A(51)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한우 28마리를 폐사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7700여만원을 타내고, 이중 12마리를 불법 도축해 일반 한우로 전처리를 속여 명절 특산품 등으로 속여 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한 송아지 혈통지원비 4000여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전취식 전과 40대 출소 후에도 상습 무전취식



○...무전취식 등으로

교도소 신세를 진 40대 남성이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는 등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쥐고 숙될 위기에 있다. ○...20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주모(45)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김모(51)씨의 식당에서 해물전과 소주 등 1만9500원 상당

의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무전취식 전과로 15범인 주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경찰은 "주씨가 일면식도 없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나중에 갚으면 될 것 아니냐'고 되래 주인을 으박지르는 등 최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5타경 1974	1	강진군 도암면 학창리 205-2 410㎡ 강진군 도암면 도암송학길 91-20 34.65㎡ 부속건물 총사, 창고(현황창고및변소)52.8㎡ 제시외면적 등 26.3㎡	전 단독주택	14,725,750 14,725,750	임말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욕1현 211㎡ [병합]
2015타경 2038	1	장흥군 관산읍 상산리 288 437㎡ 장흥군 관산읍 산서1길29-20 59.5㎡ 부속 건물 총사 외면적 등 26.4㎡ 제시외면적 등 14.5㎡	대 단독주택	10,769,400 10,769,400	임말매각, 주택포함, 매각제외타인 소유의창고등1동 소재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1998	1	강진군 병영면 석양리 227 578㎡ [매각제외] 비밀하우스1동소재	전	2,427,600 2,427,6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5타경 2090	1	장흥군 장흥읍 영전리 637-2 1170㎡ [연고 미상] 미상의분묘2기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전	8,775,000 8,775,000	총나무1주매각제
2015타경 2151	1	강진군 적전면 아물리 449 2145㎡ [순수경, 순용기지분각168본의14, 순원양, 순순초지분각168본의7, 안미순지분168본의6, 순원덕, 순수경지분각168본의4전부]	담	4,361,500 4,361,50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사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2015타경 2182	1	장흥군 부산면 유양리 5-5 999㎡ [일부도시]	담	9,990,000 9,9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계획시설 [도로] 재축
2015타경 5181	2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788 1018㎡	전	8,144,000 8,1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기타]					
2015타경 5181	1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790-3 1487㎡ [갈매] 오지분18155본의15539지분전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양여채	24,187,000 24,187,000	매각제외타인소유 [김선덕]의등, 양여채, 속사2동소재

● 공판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각기일 : 2016. 4. 11. [월] 14:00
- 매각결정기일 : 2016. 4. 11. [월] 14: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행정지원부 집행부
- 매각방법
 - 입찰방법에 비한 기밀입찰표에 대한,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과 등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붙여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1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증금의 기재요구 또는 현금을 준비하여야 하고 보증금채워야 할 경우 [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

2016. 3.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전주태